

존몰리뉴칼럼

-노동계급의

혁명적구실 4면



단일전선체논쟁 -정대연 비판 3면

한미FTA 대안 논쟁 5면

노동자당의 의회 활동 원칙 7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 대해

4~5면



3호 2006년 7월 1일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일본육상자위대 · 이탈리아군 · 폴란드군 철군 압박

자이툰도 철군하라

일본 정부가 육상 자위대의 철군을 결정하고 7월까지 모두 철수할 계획이다. 이탈리아군과 부시의 동유럽 핵심 동맹 폴란드 군마저 철군한다.

‘의지 동맹’의 철군 계획에 이어 미국 내에서도 감군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총사령관 조지 케이스는 올해 말까지 3만 명 미군 감군에 대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뉴욕타임스 6월 25일치).

이 사실들은 부시 일당이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양보라도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자신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해 마지않는 이라크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점령은 더욱 모순적이다.

부시 일당의 양보 제스처는 저항하는 이라크인들과 반전 운동을 겨냥한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부시는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심각한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다. 조지 케이스의 감군 계획 제출과 같은 날 미국의 꼭두각시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인들의 무장 저항 중단과 연합군의 철군 시한을 명시하자는 “국가 화해안”을 내놔다.

물론 감군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효과가 있다. 하나는 전쟁 동맹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이툰 부대 같은 전쟁 동맹의 일원들의 점령 지원에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잇달은 이라크 철군은 열우당



정부를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 이 갈림길에서 열우당 정부는 1천 명 감군을 통한 주둔 지속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며 반전 운동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더 큰 투쟁은 열우당 정부의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주요 동맹국들의 연이은 철군, 미군의 감군 계획 등 유리한 정치 상황을 반전 운동이 비집고 들어가고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름 휴가가 끝나면 9월 말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반전 시위를 건설하며 하반기 투쟁을 굳건히 준비해야 한다.

6·24 반전 행동 반전 운동의 끈질김을 보여 주다

월드컵 열풍 때문에 잊혀져 있던 하디타 학살을 규탄하고 자이툰 철군을 요구하는 반전 운동의 목소리가 다시 거리에서 외쳐지기 시작했다.

이 날 집회에는 거의 6백 명이 참가했다. 서총련, 사회진보연대, 일부 소규모 그룹들이 참가한 것을 제외하면 시위 대열의 대부분을 ‘다함께’가 동원했다.

아쉽게도, 좌파 민족주의 세력은 이라크 전쟁을 잊거나 회피하려 하는 반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은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함께’ 연설자 김하영 동지가 말했듯이 “자이툰 부대 철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좌절시키는 제1호 투쟁”이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날 집회는 반전 운동이 죽지 않고 살았음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거리 행인들은 그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어떤 것을 다시 목격하고는 한 방 맞은 듯한 표정들이었다.

이 날 시위를 위해 약 2백여만 원의 후원금이 조직됐다.

김광일

한국 최대의 진보 포럼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기간 :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다함께
참가신청 : 전화 02-2271-2395 인터넷 신청 www.marxism.or.kr



인용해도 될까요?

한나라당 심재철: “당의 간판 얼굴이 5·6공의 이미지여서는 내년 대선 승리가 매우 힘들어진다.”

한나라당 공성진: “영남 출신이면 다냐. 한나라당이 무슨 ‘쓰레기 집합소’냐.”
— 강삼재 · 최병렬 · 박관용 등의 복귀 소식에 대한 우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고향에 돌아가 농사짓겠다고 그랬다며? 남의 땅, 남의 고향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 대추리 김지태 위원장의 어머니 황필순 씨

“[노무현이] 취임 후 평균 2.8개월에 한 번 꼴로 모두 11차례 [부시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엔 … 9개월 동안 한 번도 서로 간에 전화가 없었다. … 대한민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세계로부터 고립됐던 전례가 없다.”

— 노무현과 부시의 ‘폰팅’ 횟수 감소에 극단적 불안감을 느끼는 〈조선일보〉

“한국의 백만장자 증가율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21.3퍼센트를 기록했다.”

— 투자은행 메릴린치와 컨설팅 회사 캡데미니가 낸 ‘세계 부유층 연례보고서’

“까르푸 조합원 대부분이 아줌마이고 … 모여 다니니까 재미있고 뭔가 기분이 우쭐해 ‘우리가 이려고 다니니 회사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구나’ 하는 자만심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 및 방자함이 얼굴에 묻어나 있었음.”

— 한국까르푸 인사 담당 이사가 까르푸 각 점포 점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 중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후퇴를 멈추라

야”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다. 배신자들(한국노총 지도부)이 비정규직 차별 반대라는 노동계 단일 원칙으로 돌아오면 될 일이지, 배신자들과 논의해서 하향평준화된 노동계 단일안을 다시 만들어선 안 된다.

비정규직 개악안의 ‘폐기’가 아니라 ‘재논의’를 내건 것부터 문제였다. 정부와 열우당은 ‘재논의’는 하더라도 개악안을 고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길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면서 “비정규직 입법 과정에서 보여 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우파적 충고를 했다.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비정규직 입법 과정에서 투쟁 건설보다 협상에 의존하며 거둬 후퇴하던 자세다. 이래서는 개악안을 막을 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없다.

지금 비정규직 ·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낮에는 투쟁하고 밤에는 야식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심지어 5백 일이 넘게 투쟁하는 곳까지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셋길로 빠지지 말고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굳건히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축하게 하기보다는 고무해야 한다.

전지윤

폭력 탄압에 시달리며 파업 투쟁 5백 일이라는 ‘슬픈 신기록’을 세운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들

최근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당들과 재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미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선 투쟁에서 거둬 후퇴해 온 상황에서 이 제안은 한발 더 후퇴하자는 말처럼 들린다.

처음에 당은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 쟁취를 내걸었다.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은 수년 간의 투쟁 속에서 제출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약한 최선의 법안이었고 그야말로

‘노동계 단일안’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인권위안으로 후퇴하더니 나중에는 사유제한을 4가지에서 10가지로 늘렸고, 다시 중소기업에는 사유제한 적용을 유예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 과정에서 사유제한마저 빼버리고 사실상 정부 개악안을 수용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이 있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그 후 기업주들과 손잡고 외국자본 유치 도우미로 나섰고, 경총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을 만드는 등 막가는 우경화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노총의 변신, 노동계 전체로 확대돼

여전히 살아 있는 괴물 – 국가보안법

지난 6월 16일 대법원은 소위 ‘건학투위’(건국대학생투쟁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됐던 건국대 학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권 초기인 지난 2003년 7월 11일, 보안 경찰은 건국대 학생 김모 씨를 ‘건학투위’라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건학투위’는 일부 학생 좌파들이 매년 결성하는 메이데이 실천단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 때문에 ‘이적단체’ 결성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3항)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김모 씨가 민주노총이나 사회진보연대 등 합법적이고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랐온 글들을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퍼나른 행위, 그

리고 시중 어느 서점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본의 이해》(강신준 저), 《신좌파의 상상력》(조지 카치아피카스 저), 《지식인을 위한 변명》(장 폴 사르트르 저) 등의 책 내용 일부분을 새내기 새터 자료집이나 빈민활동 자료집에 실은 행위가 이적 표현물 제작 · 유포 혐의(제7조 5항)에 해당한다며 그를 구속해 버렸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은 “이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아직 죽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한규한

네팔

마오주의 지도자들의 위험한 행보

지난 6월 16일 마오주의 반군 지도자 프라찬다와 총리 코이랄라가 마오주의 공산당의 임시정부 참가에 합의했다.

중앙 정부 참가가 눈앞에 오게 되자 마오주의 지도자들은 더 “실용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는 압력을 네팔 사회 주류로부터 받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의 협상에 참가한 고위 지도자 구름은 네팔 마오주의자들이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지개혁에서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고 지도자 프라찬다는 인도 정부가 지난 4월 민중 항쟁의 성공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찬양했다. 이것은 전혀 참

말이 아니다. 인도 정부는 네팔 왕립군이 네팔 마오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

네팔 마오주의자들의 이런 최근의 행보는 원래의 마오주의 정치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마오주의 반군의 소위 ‘프라찬다 노선’은 다른 나라 마오주의 게릴라들의 실패, 특히 페루의 ‘빛나는 길(센데로 루미노소)’의 실패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먼저, 과거의 중국과 달리 오늘날 농촌의 ‘인민전쟁’은 ‘도시 봉기’와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마오주의 정치에 바탕을 두고 도시에 독자적 대중정치 기반을 건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도시 봉기’는 갈수록 도시의 기성 정당들과의 연합으로 대체돼 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주이자 ‘산업’의 소유자이므로 마오주의자들은 경제 정책에서 그들과 일정 타협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둘째, 여전히 마오주의자들은 ‘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해서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라 국제 경제의 성격도 변했고, 냉전 종식 이후 마오주의자들을 도울 ‘공산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오쩌둥 시대 중국처럼 폐쇄적 산업화 전략이 이제는 더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혁명을 추구하지 않는 마오주의자들로서는 국내 자본가들뿐 아니라 심지어 외국 자본가들의 지원도 필요하게 됐다.

프라찬다가 인도 민중과 마오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인도 정부를 칭찬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구름은 “우리가 다국적기업들이 네팔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 네팔의 모습은 어떨까?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과는 다르게 사적 자본이 더 많은 구실을 할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덜 억압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중의 희생에 기반한 산업화라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용욱

단일전선체 논쟁 ①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에 대한 재반박

단일전선체는 인민전선을 추구하지 않는가?

김하영

지방선거가 끝나자 민중운동 진영에서 단일전선체(최근 ‘단일연대조직’으로 명칭을 바꿨다) 건설 논의가 다시 본격 화할 조짐이다. 이번 주에 민중연대 2차 조직발전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다음 주에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가 다시 떠오름에 따라, 그 동안 당면 과제 수행을 위해 잠시 뒤로 미뤄졌던 쟁점 하나를 다루고자 한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민중연대 조직발전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단일전선체 건설론에 대해 “대표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를 꼽았다. 요컨대, “‘단일연대조직 건설론’은 ‘계급연합론’[인민전선]이 아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동안 단일전선체가 계급연합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해 왔다. 단일전선체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강령으로 표방하며, “어느 한 계급의 힘이나 대중단체로는 이룰 수 없는 전 민중적” 과제를 위해 다양한 계급·계층이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물론 연합 범위는 ‘자민통’ 경향 내에서도 소경향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얼마 뒤 출범할지 모를 단일연대조직은 그 자체가 계급연합 조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내가 몇 차례 지적했듯이 “제2의 전국연합처럼”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진보운동세력의 단일전선체가 “한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압도적 다수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비로 자리매김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정확히 말해, 단일전선체는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추진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던 이유다.

열우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 투쟁과 활용?

만약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나에 대해 “오해” 운운하려면 ‘자민통’ 진영의 상당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단일연대조직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일관성 있는 태도일 것이다.

단일전선체 건설에 찬성하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 치고 이것을 한국 사회 변혁의 성격(민중해방민주주의)에 따른 “통일전선”(민중민주전선/전민중통일전선)의 필요성과 연관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들이 모범으로 삼는 “통일전선”은 중국의 1·2차 국공합작(4계급동맹), 프랑스 인민전선 등 대표적인 계급연합이다(이에 대한 비판은 나의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참고).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이라크 파병,

“투쟁과 활용”의 불협화음 — 전략적 유연성 합의해 준 “6·15 평화세력”(민중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정부 인사들)과 그들에게 두들겨맞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대(아래)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미국의 침략주의적 패권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족자주(반미)’강령으로 정치연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내게 반문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게 던질 물음이 아니다. 우리 ‘다함께’는 언제나 이런 입장이 운동에 질곡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열우당 정부가 침략 동맹에 나서고 있는데도 “우리민족끼리”(열우당을 포함한)를 주장하는 북한 당국이요, 북한 당국의 호소에 따르는 자민통 내 일부 세력들이다.

아마도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남북 정권의 관계와 통일은 또 다른 전선(전민중통일전선: 6·15 공동위원회)의 문제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한 당국이 “당선 가능한 6·15 평화세력후보”, 즉 열우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서 보듯이, 하나의 전선은 다른 전선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예컨대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 형태로).

그런데도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민중을 수탈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과 손잡고 통일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고는, 이 문제에서는 “둘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자[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투쟁하고 후자[통일]에 대해서는 활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활용하기 위해 살려둬야 하는가 투쟁해 없애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전제 조건인가 토론 사항인가?

이처럼 단일전선체 논의는 한국 사회 변혁의 성격, 변혁과 통일의 관계 등 굵직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가 “조직발전 논의”일 뿐이라며 “노선 문제”로 이해하지 말라는 정대연 정책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단일전선체의 강령 시안까지 내놓은 마당에 노선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들은 할 얘기를 다 내놓고 비판자들은 제한적인 얘기만 하라는 것이 될 수 있다.

단일전선체의 강령 시안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강령이라는 식으로(또는 민중연대 강령과 엇비슷하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도 온당치 않다. 단일전선체 강령 시안은 그 성분 하나하나가 민중운동 진영의 논쟁거리이다. 예컨대 강령 시안 1항은 “친미에 속성을 타파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로 돼 있는데, 민족을 우선에 둘 것이냐 계급을 우선에 둘 것이냐는 민중운동 진영에서 여전히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다.

이라크 전쟁과 파병, 한미FTA,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을 포함해 운동 진영이 단결해 투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 ‘민족 자주’라는 포괄적 강령을 부여하려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단결을 해칠 수 있다. 민족 자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세력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높은 정치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정치방침, 선거방침 등 높은 수준의 정치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을 갖지 않[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물러섰다. 이게 반대 무마용 제스처가 아니라면, “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집약해 강령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중운동의 전략적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던 단일전선체의 애초 포부는 현실에 부딪혀 거의 누더기가 되는 셈이다.

정말로 “정파적 논리를 넘어 전체 운동진영의 총단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특정 정파의 강령을 연대의 전제 조건으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한 쟁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즉 매우 협소한 강령을 둘러싸고 공동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고유 강령의 지지자들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나 운동진영의 단결을 위해서나 훨씬 나은 방법이다.

단일전선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의 소책자들을 읽어 보시오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 계급연합 전략 비판
김하영 지음
2,000원



개량주의와 변혁전략
최일봉 · 김하영 지음
2,500원



존 몰리뉴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②

노동계급의 혁명적 구실

오늘날 국제 반자본주의 운동에 널리 공감하고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아 아마 수억 명이 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고 누가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 NGO들이나 단 일정점 운동들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같은 진보적 정부들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또, 아직까지 극소수기는 하지만 모종의 무장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맑스 시대에도 급진주의자들의 견해는 다양했다. 맑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1840년대에는 프랑스 대학령에서 유래한 두 가지 경향이 좌파에서 득세했다.

첫째는 자코뱅에서 영감을 얻은 경향이었다. 그들은 소수의 계몽된 개인들이 음모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뒤 법률들을 제정함으로써 대중을 대신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회는 특권의 상속이 사라진 평등주의 공화국이겠지만, 그 사회에서도 사유 재산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둘째는 프랑스의 샤를 푸리에나 영국의 로버트 오우언 같은 사람들이 주창한 공상적 사회주의 경향이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집단지 소유)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 질서라고 확신했고, 합리적 주장과 이상적 공동체 건설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사회주의

다시 말해, 혁명가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었고 사회주의자들은 혁명가들이 아니었다.

맑스는 이 두 가지 경향을 모두 거부하고 — 더 정확히 말하면 뛰어넘어 — 혁명적 사회주의의 토대를 놓았다. 혁명적 사회주의의 핵심은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를 사회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맑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본가들에게 고용돼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새로운 계급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 맨체스터·버밍엄·런던 같은 도시들과 그보다 규모가 더 작기는 했지만 유럽, 특히 유럽 북서부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음모가들과 공상가들은 변화가 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맑스는 변화가 아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노동자들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맑스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썼다.

맑스가 노동계급에 기반을 두고 자기 정치를 정초했던 것은 노동계급이 고통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력(힘) 때문이었다. 물론 노동계급이 겪는 고통과 착취는 끔찍했고, 그 때문에 노동자들이 체제에 도전할 동기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노예들과 농노들도 수천 년 동안 고통에 시달렸고 착취당했다. 그들과 노동계급의 차이는 1)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실제로 파괴할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고, 2) 노동계급이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산물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노동계급도 성장한다. 자본주의는 이런저런 전후에서 노동계급을 패배시킬 수 있고, 파업과 노동조합 들을 분쇄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이윤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대규모 작업장에 집결시키고, 국민적·국제적 산업들을 통해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들을 대도시에 집중시킨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엄청난 정치적 잠재력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으면, 기차·버스·트럭도 움직일 수 없고, 석탄·철·석유도 채굴될 수 없고, 신문도 인쇄될 수 없고, TV 방송도 방영될 수 없고, 은행이나 학교도 문을 열 수 없다. 심지어 군대도 노동자들인 사병들에게 의존한다.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만들어내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피억압 계급을 만들어낸 것이다.

잠재력

노동계급의 투쟁은 모름지기 집단적 투쟁이다. 노동자들은 19세기의 공장 소유주들에 맞서 싸우든 오늘날의 포드나 현대자동차에 맞서 싸우든 힘을 합쳐 함께 행동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포드나 현대자동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공장을 자기들끼리 나눠가질 수 없다(농민들은 토지를 자기들끼리 나눠가졌다). 오히려 공장을 사회의 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은 사회주의적 계급이다.

더욱이, 노동계급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여전히 생산자 계급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노동계급의 발아래에서 노동계급에게 착취당하거나 노동계급을 부양하는 다른 계급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과 경제·정치 권력의 중심지인 대도시들에 집중돼 있는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위에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노동계급은 생산한 아니라 통치도 할 수 있고, 따라서 진정으로 계급 없는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인류를 해방한다.

노동계급의 이 혁명적 구실이 맑스주의의 핵심이다. 맑스의 철학·역사학·경제학·정치학이 모두 여기서 시작한다. 맑스주의 ‘동조자’의 상당수를 포함해서 학자들과 논객들이 가장 강력하게 거부한 맑스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계급이 변했다”는 것은 그들의 낯익은 구호다.

노동계급이 변했다는 것, 그들의 직종·의복·봉급·국적·문화가 변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근본적 존재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여전히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고, 여전히 착취당하고 여전히 집단적으로 투쟁한다.

오히려 노동계급의 규모와 잠재적 능력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맑스 시대에 프롤레타리아는 대체로 서유럽에 국한돼 있었지만, 오늘날은 브라질에서 한 국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며 투쟁하고 있다. 바로 그들이 사회주의의 토대이며 인류의 희망이다.

영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인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을 경주로 안내한다.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덩》(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열의 있는 일부 지지자들의 고언(苦言)

두루 알다시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강화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에 맞선 국가적 정치 투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을 평택범대위 조직자들은 평택(정확하게 말하면 대추리·도두리)이라는 특정 지역 투쟁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쟁 위험”을 강조하는 조직자들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관점이다.

물론 주민들의 권익과 관련한 현지 투쟁도 필요하다. 그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역 활동가들이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다.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미대사관이 있는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항의 시위는 서울에서 대규모로 벌어졌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평택 투쟁의 경우, 특정 지역 쟁점으로 물고가지 보니 지역의 세부적인 상황 변화에 쉽게 운동의 분위기가 영향을 받고 있다. 대추분교가 철거되고, 군부대의 견고한 철조망이 세워지고, 기지확장을 위한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운동의 지지자들은 무력감을 느끼는 듯하다.

최근 평택범대위 조직자들은 재협상 요구를 부각시키고 있다. “재협상은 미국 정부,

한국 정부, 평택 주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윈·윈·윈 전략이다”(6월 18일 평택역 촛불집회에서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의 연설 중에서) 군부대가 들어서고 대추리 접근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보는 이 운동 참가자들은 재협상이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낼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재협상 구호를 지지한다. 그러나 재협상을 강조하는 조직자들의 가정에는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재협상

먼저, 재협상은 미군의 평택 주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와 비용을 둘러싼 협상을 의미한다. 주둔 자체를 부정하고서야 협상이 성립할 수 없잖은가. 유영재 ‘평통사’ 정책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며 “그에 맞춰 평택 기지의 규모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 6월 8일지)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 역시 위와 같은 미군의 역할 변경 및 감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정이 필요할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다.”(〈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재협상의 법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송상교(변호사, 민변))

재협상을 강조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요구와 주장을 낮추는 우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자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요구에서 후퇴하는 것은 운동이 정치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에서 재협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후퇴하면서 운동의 참가자들에게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후퇴할 때인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가 아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필리핀에서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사례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후퇴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사 불가피하게 협상해야 하는 때가 오히려 어떤 운동이 (재)협상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협상은 사회 변혁에 못 미치는 정치운동의 불가피한 결과이지 주요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협주어 말하지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일부이다. 따라서 국제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택범대위 조직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이라크 점령과 자이툰 파병 문제에 대

해서는 기피하고 회피하고 있다(전략적 유연성과 자이툰 파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맛불〉 2호를 참조하시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라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려인대도 말이다.

제국주의와 국제주의

몇몇 백인 활동가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연단에서 “노린내 나는 양키놈들” 운운하는 것(6월 18일 평택역 촛불집회)은 오히려 이 운동의 협소한 민족주의적 시야를 보여 준다.

게다가 주최측과 코드가 맞는 연사만 연단에 올리는 가운데 한 발언자는 연단에서 “우리가 ‘친북세력’ 아님니까?”라고 말하는 등 주최측의 분파주의는 운동의 저변을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좁히고 있다. “다함께”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전혀 ‘친북세력’이 아닌데도 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의 성공과 자신감은 ‘전략적 유연성’이 국제적 개념인 만큼 국제 운동의 전진과 관계 있다. 이라크는 여전히 국제 반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조직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광일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저항만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전 세계 운동들과 사람들의 연대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대를 위하여
석방된 동지의 인사를 전하며
다나, 이집트반세계화단체(AGEG)

서평 《낮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저음, 메이메이 출판사

풍부한 사실, 위험한 정치

낮선 식민지, 한미FTA 는 풍부한 사실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책은 심각한 결점이 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국가의 ‘주권’, 즉 국가가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이 한미FTA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다.

이해영은 한미FTA 추진이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LG·현대 등의 재벌이 동일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자본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과 한국의 초국적 자본, 한국 정부 내외의 친미파들이 사회 나머지의 이익을 거슬러 추진하는 것이 FTA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나머지가 FTA 반대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3대 재벌을 뺀 재벌과 연대하자는

동이 발생하게 된 정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만든 세계적 불의를 고치려는 소망에 있다.

그러나 켈리니코스가 반자본주의 선언 에서 지적하듯이 “[세계적 불의 철폐가]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국가의 자율에 맡긴다면 사람들은 국민국가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저지를 수 있었던 모든 불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각각의 역사와 지리적 조건에서 유래하는 수많은 우연에 쉽게 상처받도록 방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반대 투쟁과 관련해 국민국가 강화론은 잘못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미FTA를 주로 주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결국 정부 활동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함하게 된다. 다만, 그 국가가 좀더



‘국민경제’를 위해 야 한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말이다. 이것은 국민경제를 위해 ‘협상을 제대로 하자’ 등의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그 곳에 진출한 한국 자본에게는 득이 되기 때

문이다. 실제로, 이해영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정부 협상단에게 협상에서 양보해서 안 되는 21개 사항을 조언했다. 그 중에는 “정부조달 관련 미국의 진입 장벽을 완화할 것”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공공서비스를 해체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 기업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순전히 한국 ‘국민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신자유주의 원칙과는 어긋난다.

이것은 이 책이 전반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대한 언급이 부족할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책은 대중 운동보다는 새로운 국제통상질차법의 제정을 통한 “국민적 동의의 형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해영 자신이 한미FTA 반대 운동에서 하고 있는 긍정적 구실을 폄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책의 정치적·후향적·공포하는·관점해·사·있지 않다.

김용욱

한미FTA 저지 국민 총결기의 날

일시: 7월 12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
주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www.nofta.com)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letter@counterfire.or.kr

직장, 학교, 지역사회 투쟁 소식과 사진들을 보내 주십시오. 다음 호 기사 마감은 7월 1일(토)입니다.

소식 / 보고

기아차

투쟁으로 거둔 의미있는 성과

지난 6월 8일 화성공장 도장부 옥상에서 원직복직 쟁취, 구속자 석방, 비정규직 탄압 분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 나는 15일 만에 원직복직 약속을 받아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측의 고소·고발과 경찰 수배 등 탄압을 받다가 결국 구속돼 2년 6개월 옥고를 치르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사측이 지난해 합의한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8대 노조 집행부도 무성의로 일관해서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농성을 시작한 후 선봉대와 정규직 활동가들, 조립 3부 조합원들, 비정규직 노동자 등 2백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15일 동안

거의 매일 원직복직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아침·점심·저녁 선전전을 진행했다. 조립 3부에서는 ‘G카총잡이’(부서 소식지)와 조합원들이 독자적인 식당 선전전을 진행하며 투지를 보여줬다. 이런 투쟁들이 현장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확산되자 두려움을 느낀 사측은 양보하기 시작했다. 5개월 밀린 임금의 지급

과 조립 3부 발령을 약속한 것이다. 내가 요구한 3부 1반으로 발령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현장 탄압 수단도 완전히 철폐됐고, 선봉대 대자보를 훼손한 조립 1부·2부 부서장이 식당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성과도 있었다. ‘JS’ 업체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자 20여 명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 역시 완전히 철폐됐다. 이 모든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이다. 정규직 노조의 무기력함에 침체돼 있던 활동가들은 고공농성과 함께 진행된 집회와 선전전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김우용(기아차 정규직 조합원)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하노라

출교자들의 부모님들이 학교 당국과 면담을 가졌다. 그 전에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학생들과의 동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학교 당국은 부모님들의 애절한 요구를 거절했었다. 예상대로 학교 당국은 출교 학생들이 “대화와 설득은 필요 없고 무조건 폭력”을 주장한다며 비난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지금까지 두 달 넘게 학생들을 무시하시죠?”라고 반박했다.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항의 행동이 징계를 결정하는 데에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출교가 사실상 보복징계임을 시인했다. 이 날 면담에서 교무처장은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비가 오면 걱정도 되고” 하는 위선적인 말로 부모님들을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

박할 수 있을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던 학생처장과 교무처장이 학생들을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출교자들은 농성을 계속하면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출교자들은 “좋은 결과를 위해 유화적 제스처(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변호사를 교체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대변해 줄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영만(고려대 출교자)

역사의 교훈을 곱씹기

2006은 프랑스 공장 점거 투쟁(6월)과 스페인 혁명(7월) 70주년이다. 이 역사적 투쟁은 오늘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다음 두 권의 책은 과거의 투쟁에서 배우려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민전선 비판》

레온 트로츠키/풀무질

사회당·공산당의 인민전선 정부는 자본가와 동맹을 위해 운동의 동력을 소진시킨다. 트로츠키는 인민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카탈로니아 찬가》

조지 오웰/민음사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낳은 희망의 나날들이 스탈린주의와 인민전선 전략의 실패로 처참하게 파괴되는 과정을 그린다.

지역 사회포럼 & 대학 맑스주의 포럼

한미FTA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역 : 동부지역 사회포럼 | 연사 : 이유진(녹색연합 활동가), 이정구(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 활동가)
시간 : 7월 4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동부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 2천 원 | 문의: 019-9731-7299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강원대 맑스주의 포럼 | 시간 : 7월 4일(화) 저녁 7시 | 문의 : 011-9270-8327

정기 구독하십시오



썬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썬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노동자당의 의회 활동 원칙에 대해

김인식

이번 지방선거에서 81명의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이 탄생했다. 그 중에는 ‘다함께’ 회원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동자당 의원들의 의회 활동 원칙은 어떠한가 하는가 하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의회 활동의 핵심 원칙은 무엇보다 그 활동이 의회 바깥 세계를 향한 선전·선동의 연단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지방의회라서 국회보다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활동 원칙은 다르지 않다.

노동자당 의원들은 기성 체제의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투쟁 지지 연설과 투쟁 기금 모금과 구속 노동자 방어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선진 노동자들이 느끼고 요구하는 바를 의회 다수파가 대변하는 세력들에게 숨기지 않고 표현해야 한다.

요컨대, **의회 활동은 의회 바깥의 노동자 운동에 종속돼야 한다. 철저한 사회 변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중요한 사회개혁들을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원단 전체는 당에 종속돼야 하며 작업장과 거리의 대중 투쟁을 보조해야 한다. 그 반대가 아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주의자 레닌이 적절하게 비유했듯이, “의원단은 (‘군사적’ 비유를 사용해도 좋다면) 참모부가 아니라 … 어떤 경우에는 나팔수 부대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정찰 부대이거나 어떤 별도의 후원 ‘군대’의 한 조직이다.”

소수파

노동자당 의원들은 개혁입법 자체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대중에게 심어 줘서는 안 된다.

조례는 해당 지역의 노동자와 피억압대중이 직면한 당면 과제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주의자 의원 칼 리프크네히트 — 리프크네히트는 1914년 12월 제국의회에서 유일하게 전쟁 공채안을 반대했으며, 그 뒤 로자 룩셈부르크와 클라라 체트킨과 함께 국제 반전 운동을 건설했다.

자면 까다롭고 난해한 문구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조례를 발의하는 **주요 근거**를 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극소수파다. 그래서 자본가 정당 의원들로부터 심하게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발언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 정당 의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불필요하게 그들과 어울리거나 의원들 간의 동료의식에 사로

잡혀서는 안 된다. 그러기는커녕, 노동자당 의원들은 자본가 정당 의원들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서슴없이 날카롭게 폭로해야 한다.

다수파인 한나라당을 견제한다는 명분, 또는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명분 등으로 열우당·민주당 의원들과 지속적 동맹을 맺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태도는 민주노동당의 존립 근거 — 정치적 독자성 — 를 심각하게 흔들 것이다.

지방의원들에게 따르는 제안과 유혹

에 대해 노동계급의 대의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 가령,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국가 기구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선거라는 무대를 이용해 권력자들과 그 정당들을 폭로하고 대중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전술이다. 그러나 임명직은 그렇지 않다. 계급 지배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국가 기구의 포로가 돼 오히려 그 기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지역의 관변단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압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의 노동자 단체, 사회단체, 친운동적 NGO 등과의 우호적 관계 맺기가 비할 바 없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이런 단체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사실, 국가 외곽 기구와의 관계 트기를 주되게 고려하는 것은 그런 기구들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그 기구들은 철두철미 주류 정치인들과 주류 이데올로기를 수호한다. 결국 관변단체와의 관계 개선은 노동자 의원들이 그런 기구들(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함을 뜻할 뿐이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의원직을 단지 지위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경력주의), 비판뿐 아니라 징계를 포함해 결별도 꺼리지 않는 것이 원칙있는 노동자당의 태도일 것이다.

대중 투쟁뿐 아니라 의회 활동, 두 영역의 협력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노동자당의 다른 의원들이 의회주의적 처신을 한다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않을 때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판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사회가 근본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변혁단체로서 ‘다함께’는 신문 등을 통해 이런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원칙 있게 수행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6월 22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다함께’ 주최 토론에서 안호국 당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물음을 던졌다. 왜 열우당 이탈 표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으로 갔을까?

이것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정확한 물음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우당 지지자 중 한나라당으로 간 경우는 31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종부세 등 한나라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경우는 단순히 투표에 기권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오른쪽으로 열우당을 이탈한 자들을 붙잡기 위해 애쓸 수는 없

는 노릇이다.

안 실장은 이런 물음에서 “정책 경쟁의 중요성”, “실현 가능한 정책과 수단 제시”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당의 정책들을 뒷받침할 세련된 논리적 근거를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논리적 근거 개발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의 전부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다.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 공약이 구체적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췄음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냉정하게 말해, 집권 가능성이 없는 당이 포지티브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정부와 기성 정당들의 실책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때로 “~이다”보다 “~이 아니다”가 훨씬 더 중요한 법이다.

게다가 기성 정당들은 종종 정책을 선거를 자신들에 대한 비판 차단용으로 애용하기도 한다. 오세훈은 TV 토론에서 두 번이나 “정책 선거를 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 경쟁”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당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을 훌륭하게 대중적으로 선전했지만,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배자들은 대중 투쟁으로 체제가 뒤 흔들려 기득권을 통째로 잃어버릴 상황이라야 사회 개혁을 양보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대중 투쟁을 통해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좌경화해야 민주노동당은 거대한 지지를 모아 집권할 수 있다. 2004년 총선에서 3~4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선 탄핵 반대 운동 덕분이었다.

대중 투쟁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과 수단”을 씹박하게 제시하는 것만으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을 중단하라

한 달 전 경찰은 무고한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를 ‘테러’ 용의자로 체포해 외국인수용소로 보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안산 지역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 13명을 ‘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구체적 물증도 없이, 모임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을 총으로 위협해 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가슴, 배 등을 가격했으며 발로 정강이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찌는” 등 폭력을 휘두르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끝에 이들 13명 모두 살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석방해야 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한 이주노동자는 “그 순간 나는 개, 돼지와 다를 바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겨우 3일 전에 안산 경찰서 내 ‘외국인인권보호센터’가 개설됐는데, 이 조치가 허울뿐인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6월 22일 이주노동자와 안산지역의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 서부건설노동자와 경기금속노동자의 조합원들이 안산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내보내 피해 당사자

앞에서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안산경찰서는 6년 전에도 무고한 4명의 중국 이주노동자들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해 기절할 때까지 구타한 적이 있다.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경찰은 단속을

할 때도 길에서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아무나 잡아서 막 때리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경찰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태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6월 25일 경찰의 이주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어 항의 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정원

동티모르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는 동티모르에서 나가라

지난 6월 20일 동티모르 대통령 사나나 구스마오는 총리 마리 알카티리가 사퇴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1주일 뒤 알카티리는 결국 사퇴했다.

한때 인도네시아의 야만적인 점령·억압에 맞서 함께 싸웠고 현 집권당인 프레틸린(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의 동지들이기도 한 구스마오와 알카티리가 내전 일보직전의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제국주의의 분열지배 전략이 낳은 비극이다.

남태평양 지역의 맹주를 자처해 온 오스트레일리아는 동티모르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위치한 티모르해(海)의 막대한 석유·가스 자원을 확실히 지배하기 위해 동티모르의 “정권 교체”를 추구했다.

사실, 2002년 동티모르 독립 직후부터 알카티리와 구스마오 사이에는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

구스마오와 외무장관 라모스 오르타는

제국주의 군대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기대어 동티모르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려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들의 뒤를 봐주며 동티모르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했다.

반면에, 알카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내켜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중국 같은 나라들과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동티모르의 옛 식민지 종주국인 포르투갈의 지원과 협력을 얻으려 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오스트레일리아가 동티모르 내부의 폭력 사태를 빌미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해 알카티리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사실, 지난 3월 사병 대량 해고를 계기로 시작된 동티모르 군·경의 무장 충돌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배후에서 은밀하게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반군들은 무기 반납의 조건으로 알카티리의 사임과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의 진주를 요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는 동티모르 정부가 외국 군대의 개입을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동티모르 인근 해상에서 상륙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는 반군들이 교회 건물에 사격을 가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등 치안 유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요컨대, 오스트레일리아가 동티모르에 개입한 근본 목적은 동티모르의 평화나 치안 유지가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지 W 부시가 석유와 세계 패권을 위해 이라크를 침략하고 “정권 교체”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하워드도 석유·가스와 지역 패권을 위해 인도주의적 외피를 두른 채 동티모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 열강의 동티모르 식민지 지배 역사와 인도네시아의 점령·억압, 그리고 2002년의 독립을 둘러싼 우여곡절과 그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제국주의적 횡포에 대해서는 <맞불> 웹사이트의 관련 기사(<http://www.counterfire.or.kr/1/claus.htm>)를 참조하시오.)

이수현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의 <맞불> 창간 축하 메시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강자들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희망의 크기도 커집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민중에게 늘 저항과 희망을 말해주었던 ‘다함께’ 동지들이 <맞불>을 창간한 것은 아마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배가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불>이 계속해서 노동자, 민중의 희망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의 활동가로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박인규(《프레시안》대표) 지음
2,000원

이 소책자도 함께 읽으시오



명분 없는 미국의 이란 공격

조지 갤러웨이 지음
김용민 옮김
2,000원